

특집

# ‘절대반지’로서 원자력의 유혹

—  
강상규

\* **지은이 | 강상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석사, 박사 수료 후 도쿄대학교 총합문화연구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현재는 방송대 일본학과에 재직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건강하고 의미 있는 ‘소통’과 아울러 동아시아 정치사를 현재에 이 해할 수 있는 형태로 새롭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저서로는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제국 일본』(논형, 2007),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한반도』(논형, 2008)등이 있다.

### 3·11이 제기한 문제들

2011년 3월 11일 일본을 뒤흔든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이어 연쇄적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는 거대한 대참사였다. 연이은 대재앙의 순간들은 TV로 중계되면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일본의 정치적 리더십이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가감 없이 드러내 주었다. 2011년 3·11의 대재앙은 21세기 벽두를 강타한 2001년의 9.11 테러사건과 함께 그동안 인류가 어렵게 구축해 온 문명의 바벨탑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음을 뚜렷한 영상과 함께 예고하는 듯했다. 이후 일본에서는 3·11을 다루는 관련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중 일부는 한국에도 번역, 소개되고 있다. 너무나도 많은 논의들이 쏟아져 한꺼번에 거론되다 보니, 한편으로는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난감하기까지 하다. 따라서 3·11과 관련된 논의의 방향을 명료하게 하려면 이번 대참사로 제기되는 혹은 제기되어야 할 핵심적인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된 문제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3·11에 대한 처리 및 대응과정 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의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사태의 전모가 공개되지 않고, 정부든 전력회사든 책임지려는 이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신뢰하기 어려운 대응들이 이어졌다.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정보 공개 등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의 원인에 관해서는 '상정하지 않은'〔想定外〕사태라는 말만 되풀이되었다. 방사능 피폭의 안전기준에 관한 언급도 계속 오락가락하여,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일본사회의 매뉴얼화된 대응과 함께 핵심 정보가 은폐되고 통제되는 폐쇄적 측면이 부각되었으며, 리더십의 부재라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3·11과 관련하여 마스크에서 보도된

내용은 주로 이 문제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제기되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3·11 원전사고의 누출로 인한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방사능 피폭 피해의 규모와 정도를 어떻게 추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방사능으로 일어난 피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한 수치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난점을 안고 있다.

여기서 질문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이어지게 된다. 핵심이 되는 사항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의 지질학적 특성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섰다는 점, 그리고 일본은 원자폭탄을 통해 피폭을 당한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라고 하는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인가. 정책결정자들은 무슨 생각, 무슨 의도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며 어떤 자기암시들이 존재했던 것인가. 일본시민들은 이런 결정을 왜 수용했으며,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한 현지 주민들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받아들였던 것인가.

과거를 향한 질문이 이어지다 보면 원자력발전엔 잠복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가게 된다. 3·11은 20세기 후반 내내 지속적으로 견지되어 오던 원자력 안전신화의 붕괴이자 일본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백일하에 드러냄으로써 일본에서 원자력에 얹힌 다양한 신화가 깨져 나가는 극적인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원자력발전엔 근원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차별 및 착취구조, 지배종속관계의 형태도 그 외연을 상당 부분 드러내게 되었다.

이제 질문의 끝끝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로 향할 수밖에 없다. 원전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정말 안전한 것인가. 모순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할 때 파국적인 사고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원전비용이 상대적으로 정말 특별히 저렴한가. 비용 산출 방식에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으면 과연 청정에너지인가. 그리고 원전을 대체할 다른 대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다 보면, 질문의 시선은 미래의 방향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일본과 미래사회에 3·11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하나의 거대한 비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기억으로 머물다가 잊혀질 것인가. 3·11이 일본 혹은 인류에게 던지는 간곡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결국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의문점을 따라가다 보니 질문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 자신의 발밑으로 돌아오게 됨을 직감하게 된다. 한국에게 3·11은 무엇인가. 강건너 불인가. 무한경쟁의 시대인 만큼 경쟁대상의 불행은 나에게 기회인가. 21세기는 여전히 원자력 르네상스의 시대일 수 있는가. 일국적인 관점을 존중하면서도 중국, 일본, 남북한을 아우르는 동아시아의 에너지 상황을 전제적으로 조망하면서 미래 희망을 열어 가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연쇄적인 질문 중에서도 일본이라는 지형에서 ‘안전신화’의 논리구조가 무엇이며, 어떻게 확고하게 형성되다가 동요 및 붕괴의 과정을 겪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들을 따라가 보았다.

### 지진과 피폭국의 체험, 그리고 원전의 등장

일본은 세계적으로 지진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일본열도는 태평양 플레이트, 유라시아 플레이트, 필리핀 플레이트, 북아메리카 플레이트라는 4개의 거대한 플레이트의 경계 위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지각이 매우 불안정하다. 따라서 “일본열도가 지각변동에서 생겨난 만큼, 일본의 어디에서 산다고 해도 지진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sup>1)</sup>는 산가와 아키라(寒川旭)의 언급은 일본사회에서는 일상 속의 상식이 되어 있다. 필자도 유학시절,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 지진은 온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 왔다. 산가와와는 3·11 이후 일본의 역사 속에서 지진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했으며, 일본열도에 사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지진 및 쓰나미와 더불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새삼스레 상기할 필

1) 寒川旭, 『日本人はどんな大地震を経験してきたのか』, 平凡社新書, 2011, 12쪽.

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책을 내놓게 되었다고 말한다.

대지진이 일본의 언제 어디에서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본정치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연조건은 일본인들에게 ‘위기의식’을 일상화시켜 놓음으로써, 더욱 안전한 일본의 구축이라는 소명의식과 꼼꼼한 대비태세, 아울러 암묵적으로 단결과 조화의 일본문화를 형성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대재앙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이러한 일본열도의 자연조건, 즉 언제든지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본열도의 ‘구조’적 특성을 무시한 채 일본에 54기에 이르는 원자력발전소(=핵발전소)가 건설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일본의 원자력발전량은 놀랍게도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이러한 원자력발전 수치를 곰곰이 보면서 더욱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일본이 지구상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맞은 아픈 상처와 경험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는 ‘역사’적 사실 때문이다. 히로시마에서 14만 명, 나가사키에서 7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단기간에 나왔으며, 살아남은 이들은 피폭자라는 명예를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야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질학적 구조와 역사적 특수성을 갖고 있는 일본에는 핵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한 거부감이 존재했을 터인데, 그동안 어떻게 ‘원자력발전에 대한 맹목적인 안전신화’가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며, 원자력발전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져 갈 수 있었던 것인가.

## 핵에 대한 공포와 선망 사이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몇 권의 책들이 해답의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sup>2)</sup> 우선 야마모

2) 야마모토 요시타카(山本義隆), 임경택 옮김, 『후쿠시마 일본 핵발전의 진실』, 동아시아, 2011; 다카기 진자부로(高木仁三郎), 김원식 옮김,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 녹색평론사, 2011 개정판; 고이데 히로아키(小出裕章), 김원식·고노 다이스케 옮김, 『은폐된 원자력 핵의 진실』, 녹색평론사, 2011; 小出裕章, 『原発のウソ(원전의 거짓말)』, 扶桑社新書, 2011; 高橋哲哉, 『犠牲のシステム 福島・沖縄』, 集英社新書, 2012.

토 요시타카는 일본이 원전을 개발하게 된 전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지적한다.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미합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세운 원자폭탄 제조계획인 ‘맨해튼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 전후 미국과 영국은 ‘맨해튼계획’에서 개발하고 입수한 핵기술을 은닉하고, 그것을 통해 핵무기의 독점적 소유를 유지하려고 획책하였다. 하지만 소비에트연방이 예상보다 빨리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이에 당황한 미국은 미국, 영국, 소련 3개국으로 핵독점을 한정하면서 그 이후의 핵개발 경쟁에 대처하려 했다. 그러려면 오히려 기술 일부는 공개하고 원자력발전을 민생용으로 개방함으로써, 전문적인 핵기술 유지와 부단한 갱신 그리고 핵기술자 양성을 민간회사와 전력회사에게 부담 지우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와 함께 원자력발전 플랜트와 그 연료용 농축 우라늄을 외국에 팔아서 새롭게 형성된 미국 핵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한다는 미국정부와 미국금융자본의 노림수도 있었다. 이것이 1953년 말에 미합중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UN총회에서 제안한 ‘Atoms for Peace’ 즉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숨은 의도였다.<sup>3)</sup>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를 비롯한 일본의 정치가들이 1954년에 일본에 원자력예산을 제출하여 ‘원자력기본법’을 성립시키게 되는데, 이는 산업정책의 관점에서는 원자력을 미래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권력정치의 관점에서 핵을 둘러싼 전후 국제정치의 정황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던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전후 일본 정치가들의 의식을 사로잡은 것은 한편으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목으로 핵기술을 산업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장이라는 미래의 선택지도 가능하게 해두겠다는 고민이 있었다는 이야기이

3) 아마모토 요시타카, 『후쿠시마 일본 핵발전의 진실』, 15쪽.

다. 요컨대 잠재적 핵무기의 보유야말로 원전 추진의 숨겨진 진실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후 일본의 원자력발전이 유력정치가와 엘리트 관료들의 주도하에 추진될 때, 다카기 진자부로에 의하면 여러모로 갈등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많은 일본의 과학자들은 일본이 미국에 패배한 것이 일본의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과학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자각’과 ‘반성’에 젖어있었다. 이러한 의식 속에서 발아한 과학적 합리성과 과학만능적 지향의지가 미래의 에너지로서 원자력을 수용하게 만들고 원자력에너지를 실용화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위업이자 과학기술의 위대한 성과라고 여기고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필연적인 ‘발전’방향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원폭을 얻어맞고 채 10년도 되지 않은 1954년, 그것도 마침 비키니의 (핵실험) 사고가 나서 그 방사능 피폭으로 많은 일본인이 히로시마 이상의 피해를 깨닫게 된 바로 그러한 ‘비키니의 해’에, 이른바 원자력의 도입은 강행되었던 것”이다.<sup>4)</sup> 이는 환언하면 결국 핵분열 에너지에 대한 경악할 만한 ‘공포’의 경험과 동시에 가공할 만한 힘에 대한 ‘선망’이 역설적으로 전후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서 원자력의 도입을 받아들이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원자력 추진의지에 순풍을 달아 준 것이 자원고갈에 대한 위기 의식이었다. 즉 ‘원자력은 석유위기를 극복한다’는 신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sup>5)</sup> 고이데 히로아키의 견해에 따르면, “화석연료는 언젠가 고갈되기 때문에 원자력 이야말로 미래의 에너지원이 된다”라는 전망이 일본사회에 회자되면서, ‘자원고갈의 공포’가 원자력발전을 추진하게 했다는 것이다.<sup>6)</sup>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일본의 원전 도입은 지진이나 재해가 빈발하고 피폭의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의 측면에서는 핵무기 제조능력을 잠재적으로 확보하려는 정치가들의 숨겨진 의지가 강력히 존재하고 있었고,

4) 다카기 진자부로,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 제2장.

5) 다카기 진자부로,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 제3장.

6) 小出裕章, 『原発のウソ』, 124~126쪽; 고이데 히로아키, 『은폐된 원자력 핵의 진실』, 제3장.

발전과 성장, 경제대국에의 욕망, 진보의 신념 등으로 집약되는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이윤추구를 지향하는 강고한 원자력 카르텔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 따라잡기 노력이 핵 알레르기를 갖고 있었던 일본인, 특히 실제로 원전이 들어서게 되는 지방자치체 주민들에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전이 ‘절대 안전’하다는 신화가 필요했다.

### 일본 원자력의 안전신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추진된 원자력 개발은 애초에 군사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원자력’하면 원자탄이나 핵무기와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자력의 파괴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 이를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런 점에서 앞서 언급한 1953년 12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UN연설에서 “인류의 기적적 산물이 인류의 죽음에 이용되는 일이 없고 인류의 삶에 봉사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맹세한다”<sup>7)</sup>고 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선언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후 냉전의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선언은, 그 내용의 사실여부와는 상관없이, 원자력의 이미지가 ‘전쟁과 죽음’이라는 어두움을 탈피하고 ‘평화와 건설’이라는 새로운 장밋빛 미래로 비쳐지게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신화는 원자력의 안전신화와 동전의 양면관계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일본정부나 전력회사, 마스크업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전이 ‘다중방호시스템’이며 ‘완벽에 가까운 기술’로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재해에 의한 사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이러한 ‘절대 안전’의 선전에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 학자, 기술자들이 동참했다.<sup>8)</sup> 이후 원자력에 대한 안전신화는 원자로에서 거대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예컨대 “양키스타디움에 운석이 떨어질 확률보다

7) 다카기 진자부로,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 53쪽.

8) 高橋哲哉, 『犠牲のシステム 福島・沖縄』, 33쪽.



도 낮다”와 같은 원자력 관련기구의 각종 보고서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퍼져나가는 듯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에서는 1957년 윈즈케일에서, 미국에서는 1979년 쓰리마일 섬에서 사고가 나더니, 1986년에는 급기야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최악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서, 신화화되던 원자력의 안전성은 점차 동요하게 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일본의 기술은 소련의 미숙한 기술력과는 달리 대단히 우수하다는 논리로 원자력 안전신화를 유지하려 하게 된다. 안전신화가 동요할 만한 상황에서는 원전을 추진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정치가와 기업, 매스컴, 전문가 집단이 하나가 되어—이른바 원자력무라(原子力村), 원자력 카르텔 혹은 원자력 마피아—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작업과 대대적인 장밋빛 홍보와 선전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1999년 9월 30일 도카이무라(東海村)의 JCO 우라늄 가공공장에서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임계상태가 발생하면서 현장의 작업자들이 피폭되어 사망하게 되면서 일본의 원자력 안전신화는 동요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sup>9)</sup> 그후 발생한 3·11의 후쿠시마 사태는 ‘원자력 안전신화’의 와해인 동시에 ‘일본의 안전신화’가 붕괴되었음을 전세계에 요란하게 발신하는 사건이었다.<sup>10)</sup>

### 원전 안전신화에 은폐된 구조화된 차별과 희생

고이데 히로아키 등은 원자력발전의 안전신화가 철저히 차별의 구조 위에서 구축된 것이라는 점을 오래 전부터 지적해 왔다. 원전의 안전신화는 요컨대 다음의 세 가지 종류의 차별 위에 성립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 첫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평상시의 정상가동을 위해 고농도의 방사능을 무릅쓰고 원자로에서 작업하는 ‘현장 노동자의 희생’이다. 두번째는 원전이 건설되는 땅은 예외 없이 가난한 변두리 소외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원전은 ‘지역차별’이라는 근본적인 차별 위에서 유지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방사성폐기물이라는 죽음의 재를 구조

9) 다카기 진자부로,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 제6장.

10) 小出裕章, 『原発のウソ』, 제1장.

적으로 양산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현세대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미래세대의 생존 조건을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비윤리적 차별구조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안전신화가 지탱되어 온 것은 현대인의 자기중심적 욕망과 아울러 원자력발전의 비밀주의와 은폐, 축소, 왜곡에 힘입은 바 크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비판적 지식인으로 알려진 다카하시 데쓰야 역시 최근 그의 저작을 통해 원전은 구조적으로 ‘희생의 시스템’이며, 이번 사고는 ‘상정하지 않은’[想定外]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쿄가 아닌 후쿠시마현 연안부에 원전이 만들어졌던 것이라는 점을 갈파하고 있다.<sup>11)</sup> 다카하시에 따르면, 결국 원전은 입지한 곳의 지방주민의 다양한 형태의 희생 없는 성립할 수 없는 구조적 차별에 입각한 것이라는 점에서 첫번째 희생물이 되는 존재는 바로 후쿠시마로 상징되는 주변지역과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두번째 희생은 원자로에서 작업하는 현장 피폭 노동자의 몫이다. 세번째 희생은 핵연료의 원료가 되는 국내외의 우라늄 채굴현장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에 피폭당한 희생자들이다. 네번째 희생은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원전 시스템의 구조적 부산물에 의한 엄청난 규모의 잠재적 위험을 말한다. 다카하시가 말하는 네번째 희생이란 위에 언급한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미래세대 생존 조건의 근원적인 파괴’라는 지점과 겹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최근 한국에서 저서를 내놓은 강은주의 시선 역시 기본적으로 원전의 이면에 가려진 차별, 인권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sup>13)</sup>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대참사현장을 비롯한 원전지역을 살피던 그녀의 시선에 공통적으로 포착된 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비상사고를 종식시키기 위한 결사 노동에 대한 찬미가 시작되고 있었다. 수천만

11) 高橋哲哉, 『犠牲のシステム 福島・沖繩』, 57쪽.

12) 高橋哲哉, 『犠牲のシステム 福島・沖繩』, 제2장.

13) 강은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한국』(Archive, 2012).

의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죽음의 노동.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배선을 연결하고 계기를 점검하는 ‘협력기업’의 사원들, 또는 쓰레기를 정리하여 길을 확보하고 물을 퍼내고 닦아내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는 협력기업의 계약노동자로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에 있는 수천만의 인간이 영웅으로서 찬미하고, 그들을 사지로 내몬 사람들의 책임을 애매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광경이 전개되고 있었다. (중략) 불안정한 생을 상품으로 터무니없이 깎아서 판 사람들에게야말로 방사능은 강제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 구조를 따져 묻지 않으면 안 된다.<sup>14)</sup>

### ‘절대반지’로서 원자력의 유혹

인류가 원자핵의 알갱이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쪼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20세기 초의 일이었다. 원자핵을 깨게 되면 아주 강력한 힘으로 결합되어 있는 핵자를 결합시키는 힘, 곧 핵력이 엄청나게 거대한 에너지로 방출된다는 것이 차츰 알려지게 된 것이다. 특히 우라늄이라는 대단히 큰 원자핵에다가 중성자를 부딪쳐서 원자핵을 흔들어 주면 원자핵이 불안정하게 되고 마침내 두 개의 파편으로 나누어진다는 우라늄 핵분열 반응이 발견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전야인 1938년 말 독일의 학자들에 의해서였다. 우라늄 핵분열반응에서는 일반적인 화학반응과 비교해서 ‘완전히 자릿수가 다른’ 양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폭탄에 이용된다면 기존의 폭발물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극히 고성능의 폭탄이 된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sup>15)</sup>

이제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나치 독일이 먼저 원자탄을 제조하게 되면 세계는 멸망한다. 나치가 개발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야

14) 야마구치 모토아키, 「아무도 죽이지 마라. 핵발전소 노동자는 누구인가」, 『현대사상』 제7호, 2011. 5. 강은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한국』, 138~139쪽에서 재인용.

15) 다카기 진자부로,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 제1장; 고이데 히로아키, 「은폐된 원자력 핵의 진실」, 제2장; 『Newton : 원자력발전과 방사능』, 뉴턴 코리아, 2012.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과학자들이 극비리에 추진된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세계대전의 와중에서 사람들은 원자력의 안전성이나 거기서 생기는 갖가지 방사성 물질이 인간이나 지구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그 압도적인 힘을 손에 넣는 것에 매진해 들어갔다.

원자핵분열에서 발생하는 힘이 ‘비교가 불가능한 압도적인 힘’이라는 사실에 생각이 미쳤을 때, 이제 원자력은 잠재된 인간의 욕망을 꿈틀거리게 하고 요동치게 만드는 ‘치명적인 유혹’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힘을 장악한 자가 세상을 손에 쥐는 것은 누가 봐도 불을 보듯 명료한 사실로 비쳐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교 불가능한 압도적인 힘! 그 힘이 설령 온 세상을 재앙으로 내몰아간다고 하더라도, 아니 어쩌면 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존재가 그 힘을 갖기 전에 자신이 그것을 장악하고 싶은 욕망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원자력을 장악하려는 인간들의 모습은 마치 톨킨(J.R.R. Tolkien, 1892~1973)의 『반지의 제왕』(The Lord of the Rings)에서 묘사한 ‘절대반지’(The One Ring)의 마력에 홀리는 존재들과 그대로 겹쳐진다.

핵무기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지부를 찍은 이후에도, 원자력이라는 ‘비교가 불가능한 압도적 힘’을 경험한 인류는 ‘절대반지’의 유혹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그것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공포의 존재였지만, 죽음과 파멸을 불사할 만큼 매력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원전이 추진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원자력의 이미지를 ‘전쟁과 죽음’에서 ‘평화와 건설’로 완전히 뒤집는 ‘발상의 전환’이자 그 자체가 ‘역사의 진보’처럼 보였다. 이제 ‘절대반지’로서 거대한 원자력이 인간의 손 안으로, 저마다의 일상 속으로 파고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여기에 인류 대재앙의 불씨가 숨어 있었다. 왜냐하면 다카기 진자부로 등의 표현을 빌리자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세계의 에너지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발 딛고 사는 세계, 즉 원자핵의 안정을 토대로 이루어진 세계에 거대한 파괴력을 갖는 이물질들을 투입하게 된 것”이며, 이로부터 인간의 생명, 지구환경과는 끝내 공생하

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요컨대 거대한 “불을 켜는 기술”로 원자력이 발전했지만,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방사성물질이나 원자력 폐기물의 방사능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인류가 가지고 있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었다.<sup>16)</sup> ‘절대반지’로서 원자력의 유혹에 의존하면 할수록 인간의 영혼과 지구환경은 골룸의 형상처럼 병들어 갔다. 그것은 현대인의 단기적인 이익과 자기중심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미래세대의 생존조건을 근원적으로 파멸시키는 행위에 다름 아니었다.

인류의 20세기는 에릭 홉스봄(Eric John Ernest Hobsbawm, 1917~)의 표현을 빌리면 ‘극단의 시대’였다. 한편으로는 인류가 과학기술혁명 등에 힘입어 대중들까지 포함하여 전에 없는 풍요로움을 구가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의 전쟁과 핵무기의 등장, 군비경쟁의 악순환, 내란, 이념대결, 집단적 광기와 학살, 혁명과 파괴와 같은 상처로 얼룩진 시대였기 때문이다. 어쩌면 ‘극단의 시대’인 20세기, 인류는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고속열차 위에 올라타고 말았는지 모른다. 과연 누가 어떻게 ‘절대반지’를 파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인류는 ‘절대반지’의 유혹을 떨쳐내고 세계를 구할 수 있을까.

### 근대 이후 일본시스템에 대한 성찰

19세기 이후 제국 일본과 21세기 경제대국 일본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원자력이었다. 전자가 극도로 부국강병을 추진해 가다 외부로부터 날아온 원자폭탄에 멈춰선 것이었다면, 후자는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려고 스스로가 지진대에 들여놓은 원전의 폭발사고에 의한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다카기 진자부로(1924~)의 저서가 일본에서 출간된 것이 2000년이다. 아울러 3·11 직전인 2011년 일본의 대표적 잡지중 하나인 『세카이』(世界)의 신년특집은 ‘원자력 부흥의 위험한 꿈’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평자는 책을

16) 다카기 진자부로,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 30, 34~42쪽.

읽어 내려가는 동안 마치 후쿠시마 사고를 그대로 예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소리는 ‘절대반지’의 유혹을 막아내지 못했다. 그러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상가 쓰루미 슌스케는 3·11 이후 일본사회를 보고 있노라면, 수많은 정보가 시시각각으로 쌓여 가지만 사람들의 사고가 ‘조각난 것’들이라고 지적한다. 일본인 위로 떨어진 원자폭탄에 관해 우리는 응답하지 않은 채 살아왔으며, 그리는 중에 지진, 해일, 원자로 파괴로 이어지는 3·11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일본의 언론은 전후 자민당의 책임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현재 민주당 정권의 비판에만 열중하는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sup>17)</sup>

거의 모든 일본인에게 자민당이든 민주당이든 정부는 시해를 베푸는 ‘주인’이며, 조금이라도 실패하면 매도해야 할 상대다. 죄송하다고 땅에 엎드려 조아리면 그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지만 웬지 체증이 가라앉는다. 거기서 민주주의적 선택 따위는 허황된 이야기며 그런 일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더라도 누구 하나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허황된 민주주의가 기능하는 사회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주인’도 자기 책임이나 위엄 따위도 없다.<sup>18)</sup>

이와 관련하여 사카모토 류이치 역시 3·11 사태를 보면서 일본이라는 시스템에 배어 있는 자립적 사고의 부족, 일본 민주주의의 미숙함이야말로 일본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원전의 문제를 풀려면 일본이라는 사회를 전체적으로 보다 성숙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요지이다.<sup>19)</sup>

다카하시 데쓰야는 전후 일본의 희생시스템은 전전의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17) 쓰루미 슌스케, 「일본인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지금 마음속에 떠오른 것」, 쓰루미 슌스케 외, 윤여일 옮김, 『사상으로서의 3·11: 대지진과 원전 사태 이후의 일본과 세계를 사유한다』, 그린비, 2012, 82~85쪽.

18) 히가키 다쓰야(檜垣立哉), 「자연은 당연히 난폭하다」, 쓰루미 슌스케 외, 윤여일 옮김, 『사상으로서의 3·11: 대지진과 원전 사태 이후의 일본과 세계를 사유한다』, 191쪽.

19) 坂本竜一, 「原発問題を抱える今の日本を, 世界はどう見ているのか」, 飯田哲也 외, 「私たちは、原発を止めるには日本を変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います」, ロッキングオン, 2011, 9~29쪽.

‘무책임의 체계’ 위에서 존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일본에서 발생하는 핵발전소 사고나 문제 은폐의 양상이 전전 ‘대본영 발표’에 의한 진실 은폐와 닮아 있으며, 아울러 원전을 운영하는 과정이나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자력 카르텔의 태만과 욕망의 실패, 파산의 결과를 온몸으로 수습하도록 강요받는 희생자를 이름 없는 영웅으로 숭고하게 둔갑시킨다는 점에서 전쟁 중의 가미가제나 옥쇄, 독고다이(特攻隊)를 연상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는 이시바시 가쓰히코(石橋克彦)의 『세카이』(世界, 2011년 5월호)에 실린 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전전 일본이 ‘군국주의’ 국가이고 전후 일본이 ‘원전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전전의 군국주의나 전후의 원전주의 모두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여 추진되었던 국책사업이었으며, 각각 ‘불패(不敗)신화’와 ‘안전신화’를 만들어 놓고 일체의 이론(異論)을 배제하고 ‘대본영발표’에 의해 국민을 계속하여 기만한 끝에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고 강조한다. 요컨대 ‘불패신화’에 기댄 군국주의의 파탄이 8.15이고, ‘안전신화’에 기댄 일본 원전주의의 파탄이 3·11이라면, 일본역사에서 이제 3·11의 의미는 일본사회 시스템이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0)</sup>

###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어야 한다

2012년 8월 현재 일본의 원전 54기는 가동 재개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후 일본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가변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3·11이후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후쿠시마 사태는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원전의 또 다른 위험성을 노출시켰다. 이번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사태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테러와 같은 계획된 도발로 인해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국가 간 분쟁 가능성이 여전히 매

20) 高橋哲哉, 『犠牲のシステム 福島・沖縄』, 72쪽.

우 높은 지역이다. 더욱이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인류가 두려워하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조직의 결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3·11은 안보문제라고 하는 또 다른 가시적 위협의 발생가능성을 선명히 드러낸 셈이다. 따라서 당장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기에 원전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간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모험주의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현재의 양상을 보면 ‘절대반지’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도래하게 될 미래의 재앙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시세의 절박함이 위태롭기 그지없는데, 혹시 자신에게 불벼락이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아무 근심 없이 즐겁게 지저귀고 있는[燕雀處堂] 형국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한다. 21세기 동아시아는 기로에 서 있다. 미래로부터의 시선이 지금 우리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